

차관급 공직자 대상 참여정부 국정토론회 워크숍

우리 사회 부패를 줄이는 방법은 투명성과 시민의 참여입니다.

민주화운동할 때 공무원을 많이 비판하기도 했고 야당할 때 좀 독하게 한 것 같기는 하지만 제가 정말 소개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에게 반감이 없고, 신뢰와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만큼 온 것은 공무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시작하면서 관행적이던 작은 비리들, 대국회 활동에서 불가피했던 일들을 수용하고 넘어가느냐를 두고 고민 끝에 일단 장관이 방어하는 쪽으로 해서 한 고비 넘겼습니다. 공무원을 신뢰한다는 원칙으로 출발했습니다.

세계가 거의 비슷한 민주주의 제도를 갖고 있으나 실제로 실천되는 현실 민주주의 수준에 차이가 나는 것은 국민참여 수준 차이 때문이며 국민을 그냥 존중하는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실천하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부패를 줄이는 방법은 투명성과 시민의 참여입니다.

대통령이 관여해선 경제정책이 잘 안되는 만큼 경제는 경제부총리가 앞장 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경제가) 성공한 사례가 없고, 경제부총

리가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서 좋은 결과가 없었다는 게 경험입니다. 대통령 당선후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라는 책을 다시 읽어보는 등 대통령이 나설 한계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조세체계를 바꾸면 어디서 핑크 날지 모른다면 주저하는데, 소신껏 주저없이 밀어붙이는 대통령이 있을 때 합시다. 한번 한다고 하면 소신과 배짱을 갖고 밀어붙일 저같은 대통령을 다시 만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왕조가 교체되면 한국의 왕조가 교체되거나 정변이 일어났던 게 한국의 역사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칫 일본과 중국의 군비경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또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놓고 국내갈등을 겪어야 하는 팔자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 동북아를 수평적인 협력질서로 만들어 갑시다.

강자끼리 타협하면 부정부패, 반칙, 특권의 카르텔이 형성되므로 공직사회가 강자의 카르텔에 참여해선 안 됩니다. 길거리 포장마차 하는 사람에겐 법이 시퍼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무너지지 않지만, 강자에게 약해선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지 못합니다. 언론을 그렇게 할 것은 아니지만, 권력과 언론이 강자 카르텔을 형성하지 않도록 절제해주는 것은 자신들의 의무입니다. 적절한 방어는 정부의 신뢰와 직결되므로 정부의 신뢰를 손상하는 보도가 나왔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넘어가면 직무유기입니다. (정부의) 일이 잘못됐으면 고치고 보고하고, 보도가 잘못됐으면 피곤하겠지만 반드시 고치고 보고해 주십시오. 그런 불편을 감수하는 게 더 합리적인 사회로 가는 과정입니다. 왜 언론과 싸우느냐고 하는데, 싸우고 싶어 싸우는 게 아니고 자꾸 싸울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게도 많은 오류가 있을 것이고,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여러분끼리 대통령을 적당히 홍보는 건 괜찮지만 돌이키기 어려운 제 잘못이 있다면 제게 먼저 말해주십시오. 언론에서 때때로 억울한 비판을 많이 하므로 밖으로 말하기 전에 우리끼리 먼저 시정해봅시다.

이라크전 파병과 관련, 한국정부의 자주성과 세계보편 가치에 비춘 정당성의 문제제기가 있는데 한반도가 분단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문제로 남한 내부에서 치열하게 이념.이론적으로 대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떳떳하려 해도 우리는 분단국가이며 이 분단이라는 조건에서 지금도 한국은 변방국가입니다.